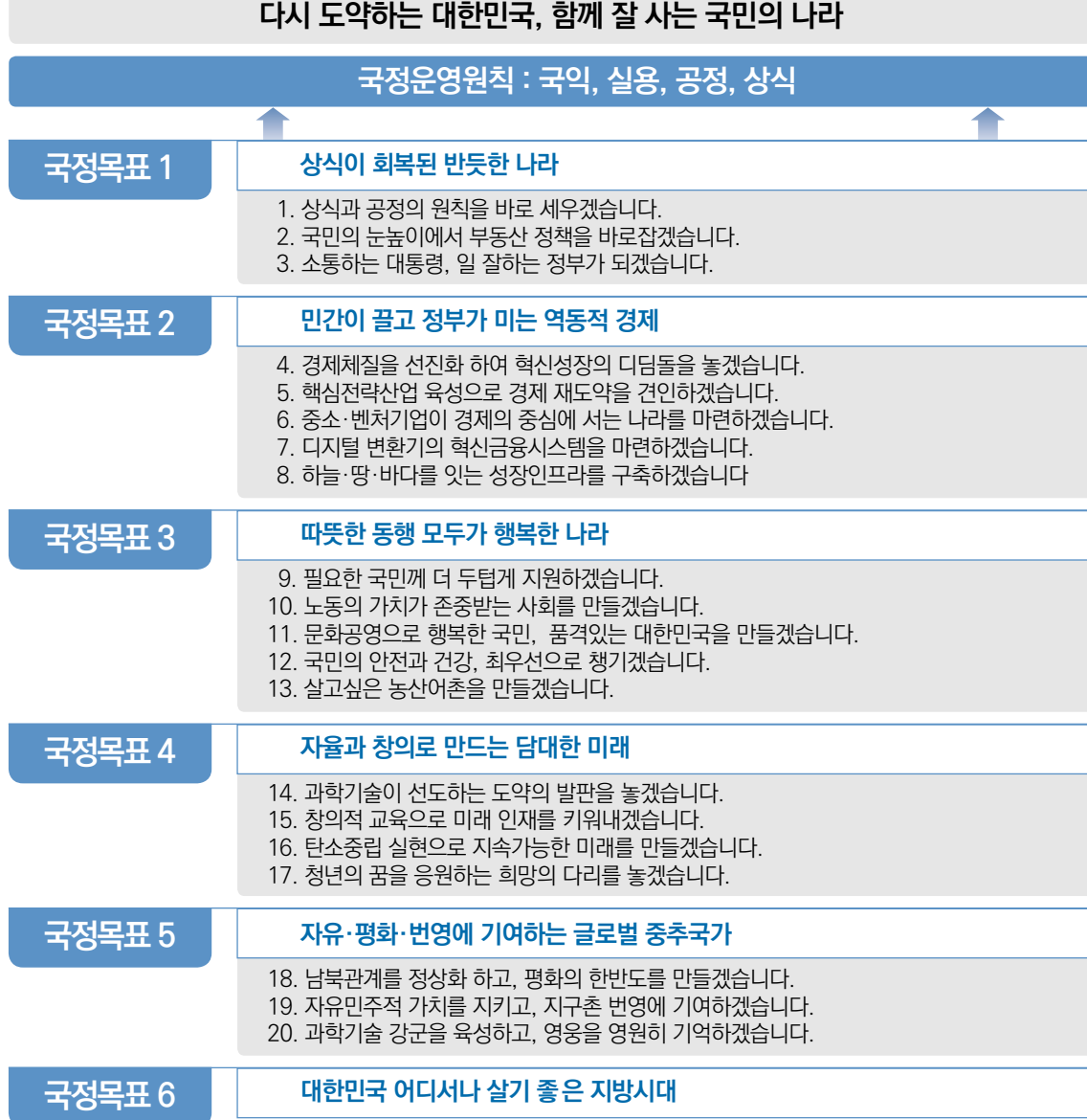


1. 국정과제와 공약

1) 110대 국정과제

- 의의
 - 2022년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음
 - 거기에는 국정 목표와 국가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활동을 통해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할 수 있음
 - ▶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 트리 형태의 체계
 - 비전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비전 달성을 위한 개개의 국정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일종의 트리 형태를 띠면서 연계성을 갖고 있음
 - 일종의 목표-수단 관계를 갖는데, 우선은 비전(목표)-국정목표(수단)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다시 국정목표(목표)-국정과제(수단)의 연쇄관계를 갖게 됨
 -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는데,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음
 - 추가된 미래,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는 미래지향성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과 관련된 공약 추출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은 행안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 **국정목표 1-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1-3-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부, 행안부, 개인정보부)
 - 1-3-12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국조실, 행안부)
 - 1-3-13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목표 3-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3-12-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소방청)
- **국정목표 3-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3-13-70 : 농산촌 자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행안부)
-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별도) 15대 국정과제-76개 실천과제 (4.27 지역균형발전특위 발표)
 - (별도) 균형발전 지역공약 :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 (4.27)

2) 지역균형발전 비전 : 국정목표 6의 국정과제-실천과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도약'을 강조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4월 27일 발표
- 약속①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약속②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약속③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약속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
- 또한 17개 지역에서 상기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지방 재정권 강화,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형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개 정책과제도 제시

3) 지방의회의 관련 과제 추출

-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먼저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관련된 중앙부처인 행안부 관련 과제를 추출하였고, 다음으로는 국정목표 6에 속하는 지역균형특위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과제를 추출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11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 1-3-11-13 ← 지역(행안부) 관련
국정목표 3-12-65, 3-13-70 ← 지역(행안부) 관련
국정목표 6-1~15(76) ----- (지방의회) 6-1-3-4 ; 6-6-1~3

- 지역(행안부) 관련된 과제는(디지털플랫폼, 소통, 유연한 체계 등) 국정목표 6-1~15의 내용과도 적정 매칭된다고 할 수 있음
- ▶ 공통적으로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목표이거나 수단일 수 있음(디지털플랫폼, 소통, 유연한 체계 등)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국 정 과 제		실천과제 (76개)
①	지방분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의 개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 세종)
②	지방재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인간
③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⑥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⑦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 지정 및 운영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⑧	공공기관 지방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추가 이전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⑨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광역권 친환경농촌단지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아톰타운 돌봄 주민운동
⑩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구경제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⑪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기반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⑫	신성장 산업의권역별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 산업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산업·혁신지구 지정 및 육성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⑬	지역사회의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골목상권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중양-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발 정비 및 강화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⑮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도 시너지 제고 ●국정과제 이행률 표명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제편에 지속적 관리 ●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에 실천 동력 확보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제3도 제고

2. 지방의회 관련 공약 내용

1) ③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신규】(6-1-3)

-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민법사업 추진

2) ④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신규】(6-1-4)

-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권 확보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
-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확보

3) 6-6-1~3

① 주민투표제도의 개선【신규】

-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주민직접참여 방안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통제 실현
- 현황 「주민투표법」에는 지자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민이 표결하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이 지방행정을 통제하기 곤란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대상과 요건에 대한 장벽 완화
 - ▶최소에 대한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도입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주민의 직접 통제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 ▶최소투표율을 완화하여 사실상 공개투표의 위험과 관권에 의한 주민의사 왜곡 방지

②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신규】

-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지방행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지방의회 일당 지배구조로 인한 폐단 극복방안 강구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③ 지방감사제도 독립성 강화【신규】

- 감사기구 합리제화 전환 및 지방감사기관 독립성을 확보
 - ▶독립제 감사기구를 합의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검토 또는 감사기구의 장 임명에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도입을 검토
-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등의 개선으로 단체장 등의 책임성 강화
 - ▶단체장의 선심성 사임 또는 자의적인 행정운영에 대해 정치적 책임 외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도 개선 추진

3.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1.13)과 더불어 새 정부가 시작된 해
 - 전부개정의 입법취지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중앙부처인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시행내용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정책입안 및 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
 -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내용을 좀 더 강화하거나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가령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자율권 확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자율과 책임의 등가원칙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지방의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이를 통한 의회에 대한 견제 강화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행안부 담당 국정과제와의 조화 필요
 - 디지털플랫폼 지방의회,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임

내용문의 :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cigma@krila.re.kr)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pp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